

各黨候補들의 統一關聯 發言內容

— 第13代 大選期間中 —



2008.11.11
2008.11.11
2008.11.11
2008.11.11

國 土 統 一 院
調 查 研 究 室

I. 民主正義黨 盧泰愚大統領候補의 統一關聯發言... 3

II. 統一民主黨 金泳三大統領候補의 統一關聯發言... 25

III. 平和民主黨 金大中大統領候補의 統一關聯發言... 47

IV. 新民主共和黨 金鍾泌大統領候補의 統一關聯發言... 71

I. 民主正義黨 盧泰愚大統領候補의
統一關聯 發言

미·일 순방시 주요발언내용

1. 한국의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

「이 시대 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현실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란 극단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극우이든 극좌이든 극단주의는 민주적 정치발전과정에서 대한 최대의 적이다. 어느 한편의 극렬세력에 불모가 되어 있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결코 극우, 극좌를 물리치고 민주주의 실현을 해낼 수 없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과감한 민주개혁에 의해 극렬세력을 주류의 흐름으로부터 고립시키고 동시에 다른 쪽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어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국내 일부 젊은 층의 반미·일 감정에 대해 우방에서 혹시 염려하고 있을지 모르나 이는 반미·일 차원이 아니라 오랜 외세의 침략에

따른 민족자부심을 회복키 위한 민족주의적 차원의
감정이다。」〈 1987. 9. 15, 현지, 미국 내셔널프레스클럽
연설 및 9. 18, 일본 나카소네 수상회견 〉

2. 남북한 관계 : TV 상호 교환연설 제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대화를 적극 추진해
야 한다. 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치게 되면 남북한간
의 긴장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본다.

우리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정착을 위해 북
한의 주석인 김일성과 만나자고 이미 남북한 최고
당국자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본인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김일성주석을 서
울에 초청, 한국 TV에 나가 마음대로 이야기 해
보라고 하고 우리측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동
포들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제의했으면 한다.」

〈 1987. 9. 15, 현지, 미국 내셔널프레스클럽 1문1답 〉

3. 남북한 교차승인의 발전적 추진

「본인은 궁극적으로 중공과 소련이 한국을 승인하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승인하는 교차승인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88 서울올림픽이 끝나면 남·북한은 대등한 입장에서 벗어나 엄청난 격차가 생길 것이며, 따라서 대북정책도 진일보 할 시대가 왔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일·중·소 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 방안도 유연성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올림픽이 끝나면, 큰 형(大兄)의 입장에서 의연하고도 유연하게 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양보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같은 방향에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정착을 구상하고 있다.」

< 1987. 9. 14, 현지, 존스홉킨스대 연설 및 9. 18 일본나카소네수상회견 >

4. 작전지휘권 문제

「주권국가가 자신의 군대에 대해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장차 우리는 이 문제가 그같은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작전지휘 체계는 그렇게 바뀌어질 것이다.

그러나 작전지휘권 변경문제는 자칫하면 남·북한 군사 불균형을 초래, 전쟁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는 미묘한 문제이므로 선거용 쟁점으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실현될 수 없으나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 1987. 9. 14, 현지, 워싱턴포스트지 편집간부들과의
오찬회 1문1답〉

5. 한국의 학생운동 및 노사분규

「젊은이들이 정치현실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전에 정부가 그들의 이상을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

겠다.

급격한 산업발전으로 성장과 안정에 정책이 치우치다 보니 소홀한 점이 있었다. 이제 기업들도 근로자의 정당한 몫을 지불할 때가 되었다.」

〈 1987. 9. 15 , 현지 , 미국 네셔널프레스클럽 연설 〉

6. 남북한 군축 및 주한미군 철수문제

「남북한 군축 이야기는 북한에서도 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은 군축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한미군철수에 그 목적이 있다.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하면 한국은 북한의 62%에 지나지 않아 군사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군사균형이 이루어진 바탕 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불가침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글라이스틴 전 주한미대사가 주장하는 군축등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팀스피리트훈련의 경우, 북한도 똑같은 훈련을 하고 있다. 한국측은 팀스피리트훈련이 공격적인지 방어적

인지를 북한측이 직접 와서 보라고 제의한 바 있다.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 1987. 9. 19, 일본 기자클럽 1문1답 >

7. 남북한간 올림픽 분산개최 문제

「IOC 사상 유례없이 5개 종목의 경기를 북한에 주겠다고 하며 동참을 요구했으나 실패했다. 따라서 앞으로 공동주최에 관한 이야기는 더이상 제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의 참여문제에 관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 1987. 9. 15, 현지, 미국 네셔널프레스클럽 및 9. 19, 일본기자클럽 1문1답 >

노태우총재 특별 인터뷰

1. 젊은층의 의식을 민족주의의 발로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다면 평소 노후보의 민족주의관은 무엇인가요?

「민족주의와 관련한 우리의 역사관은 하루빨리 재정립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수없는 외침에 따른 굴복, 위축, 반성등 이러한 감정을 너무 앞세워 엮어놓은 것이 지금까지의 민족사관이 아닌가 합니다.

5천년동안 단일민족이 당당히 생존해왔다는 사실에서부터 우리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정리해 볼것 같으면 우리민족은 남들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우수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일제 36년, 6.25 등 모든 어려움을 뚫고 노력해 나라를 건설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우리도 어느 정도 남부럽지 않는 상태에까지 왔습니다.

배고픈 한, 외침에 대한 한, 무지의 한 등 우리역

사의 세가지 한을 이제 풀 때가 왔습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달리 외세에 시달리지도 않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비굴함도 없어요. 남한테 전혀 꿀릴 것이 없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우리 젊은이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식의 재출발시점에 와 있으며 특히 정치지도자들은 젊은이들이 에너지를 취할 수 있도록 자양분을 대주어야 합니다.]

2. 일부대학생의 급진좌경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또 반미경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급진좌경세력의 문제점은 겉으로는 민주화를 내세우면서도 선거에 의한 정권승계방식이 아니라 폭력혁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산업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치유를 위해 법질서 태두리내에서 개혁을 위한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원리의 밑바탕을 송두리째 뒤집어 엮어 체제전

북을 기도하는 급진좌경세력을 남북한 분단의 안보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반미 감정은 우리의 성장·발전에 따라 민족적 자존과 자긍심이 높아진 결과의 발로이자 젊은 세대의 이상과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의 일단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으로 반미감정이 많이 자라는 것 같아요.」

3. 노후보께서는 최근 민족주의 문제와 함께 전향적인 대북자세를 표명하셨는데 평소 구상했거나 이번 선거에서 제시할 통일관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의 입장이 남다른 만큼 특별히 신중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미 민족통일에 대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만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고 나면 남북간의 체제경쟁은 사실상 끝나게 되고 북한측은

우리의 데탕트정책에 응해오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엄할때 엄하게 가르치되 웬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관용도 베푸는 “만형정책” (Big Brother Policy)을 북한에 써볼만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향신문, 1987. 10. 6, 3면〉

제 137 회 정기국회 (87.10.6) 대표연설

1. 급진좌경 이데올로기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일각에, 시대적 요구를 거슬리는 극단주의가 아직도 남아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폭력혁명을 통해서라도 친북적 사회주의정권을 세우겠다는 급진좌경세력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민중」운운의 그럴듯한 사술적 용어를 쓰면서 반공의 가치도 전면 부정하고 우리의 안보체제를 매

도하며 오로지 폭력적 체제전복을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주의가 소중하면 할수록 민주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이들에게 민주주의의 공간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대다수 국민의 참뜻입니다.]

「특히 급진적 좌경폭력혁명세력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함께 꾸짖고 함께 설득하고 때로는 함께 차단시키면서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해야지 그들을 부추기거나 선동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입니다.]

2. 통일문제

「우리가 나라의 진정한 민주화를 추진하면서 잠시라도 잊을 수 없는 과제는 민족의 평화적 통일입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꾸준한 외교적 노력에 힘입어 민족의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국내외적 여건이 차차 익어가고 있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력이 점점 커지면서 민족적 긍지가 높아져 분단을 우리 손으로 해소해 보자는 열기가 확산되는 한편, 북한과의 발전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왕조적 세습체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평화적 정권교체로써 민주화가 촉진되어 나갈때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이 될 것입니다.」

「더우기 동서접근의 상징이 될 서울올림픽의 화해 분위기는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본인은 민족의 통일문제는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에 입각해 남북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우리 정부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전제하면서, 3단계 접근방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의 인적 교류와 서신왕래, 그리고

관광·문화·예술교류로 시작하여 통상과 경제협력을 증대시키면서 마침내 민주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평화공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안보태세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군의 주둔을 계속 확보하면서 한·미간의 안보체제를 더욱 굳건히 다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일 협력관계를 심화시키는 한편 우방과의 유대를 두텁게 하고 비동맹권에 대해서는 물론 공산권에 대해서도 과감히 접근해 나가는 활력있는 전방위의교를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태우 대권주자에게 묻는다

1. 70년대이후 우리사회구조의 중요한 변동 가운데 하나가 진보혁신세력의 두드러진 표출이며 최근에는 급진좌경 용공세력까지 발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왜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만약 집권하게 되면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우리사회 각 분야가 급속도로 변화 발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파생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당에서도 여러차례 이야기했지만 “좌경”이라는 표현은 안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좌익”과 구별을 지어 국가발전을 위해 수용해야 할 진보 혁신세력까지 배척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민주화를 내세우면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까지 부정하는 극좌폭력혁

명세력은 법에 의해 척결해야겠지만 복잡한 이데올로기의 다층화현상 속에서 수용과 척결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적 화합을 극대화시켜 나가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 극좌폭력혁명세력의 문제가 어느정도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또 그것을 사회발전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과성(一過性)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뿌리를 내리는 단계라고 보십니까?

「두가지 측면에 주목하고 있어요. 사회발전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과성 현상이라고 보면서도 우리는 아무리 자생좌익이라도 그들을 고무 선동하기에 혈안이 돼있는 북한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실제로 요즈음 그러한 세력의 확대가 북쪽의 영향을 적지않게 받고 있다고 봅니다. 아문든 우리는 극좌세력에 대항한 지속적인 경계와 함께 진보혁신 세력들을 민주화과정에 적극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

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6.29 선언” 이후 상당한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동아일보」, 1987.10.23, 3면〉

**1987.11.27, 안보 및 통일에 대한 공약 발표시
3 단계통일방안 (불가침협정 → 각료회의개최 →
통일헌법 제정) 제시**

1. 평화적 민족통일의 추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대북우위의 국가역량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불가침협정을 포함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우선 체결한다. 통일을 향한 중간단계로 남북한의 유엔가입을 추진하고 미·일·중·소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남북한간에 경제·사회·문화·체육·과학·기술·교육·

예술등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킨다. 남북한 각료회의를 정례화시킨다. 남북한 협력공동체를 구성, 운영한다. 남북한 신뢰회복과 상호협력으로 구축된 민족동질성의 바탕위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공경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에 의해 제정된 통일헌법에 따라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도록 한다.]

〈서울신문, 87. 11. 28 자, 1,5 면〉

「중공과는 무역대표부 형태의 관계수립을 적극 모색하겠다.」 〈동아일보, 87. 11. 27〉

「중·소 및 동구 공산권과 교류확대 특히 중화인민공화국과는 임기내에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겠다. 그러면 동북아의 영구한 평화도 정착될 것이며 남북통일도 해결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인천유세, 동아일보, 87. 11. 28 자, 1면〉

공 약 정 리

1. 통 일

통일문제는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접근해 나가겠다. 과거 냉전적 발상으로 접근한 경향—즉 민족문제의 대립적·투쟁적사고—를 앞으로는 지양, 북한에 대해서는 큰형처럼 대하는 이니셔티브를 취하겠다.

상호 비방하고 괴롭히는 적대논리에서 벗어나 서로 돕고 함께 잘사는 호혜논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 외교·안보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다시한번 강력히 추진하겠다. 한국적인 작전지휘체제를 확립하고 미군의 작전지휘권을 우리가 이양받도록 노력한다.

예비군 편입후 8년간만 의무훈련을 받도록 하는 북

무연한제를 도입하고, 군입대가 늦은 사람에게는 현재의 연령연한인 35세까지만의 의무복무를 적용한다. 대입재수생도 1년간 입영연기혜택을 주도록 한다.

〈조선일보, 87.11.26 자, 3면〉

Ⅱ. 民主統一黨 金泳三大統領候補의 統一關聯 發言

선거공약 및 정강정책

1. 선거공약

「민족통일원 장관이 비경제분야(외교, 안보, 내무, 법무, 국방, 문공, 문교등)의 국정을 관장하는 부총리를 겸하도록 한다.

외무부 산하의 외교안보 연구원과 통일원 산하의 통일연수원을 통합하여 “민주통일연수원”을 설립한다」

「남북불가침 협정체결을 적극추진하고 정상회담등 남북대화를 심도있게 재개, 평화공존의 바탕위에서 한반도 비핵지대를 추진한다.」

「군의 주체적 통솔을 위한 군작전지휘권 환원을 적극 교섭추진한다.」

「한·미행정 협정상의 불공정조항을 시정한다.」

〈동아일보, 1987.9.4, 2면〉

2. 정강 정책

「우리 통일민주당은 이시대의 지상명제인 민족통일 성취와 조국의 민주화투쟁에 앞장서는 국민정당임을 선언한다.

우리 당은 통일이 민족재생의 출발임을 확신하고 자주적이고 평화적 방법으로 이를 실현하여 희망찬 민족사를 창조하는데 앞장선다.

(1) 민족통일이 정치적이념과 체제를 초월하는 민족사적 제 1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국정의 지표로 삼는다. (2) 자주적 통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 관계국들과의 교류를 적극 촉진한다.

(3) 남북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등 모든 분야에 점진적 상호교류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민주통일을 앞당긴다.

(4) 한반도에 상존하는 전쟁위협과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에 유념하여 전쟁억지에 적극 노력한다.

(5) 통일논의를 국민적 차원으로 확대한다. 통일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통일운동을 민주적 방식으로 전개한다.]

< 통일민주당 정강정책, 1987.5.1, P. 3, 11-12 >

정책입안 5원칙 및 집권 8대목표 제시

1. 정책입안 5원칙

「 통일정책을 개방하는 통일지향 원칙 (3 항) ·
국민갈등을 화해와 일치로 전환시키는 민족화해
의 원칙 (4 항) . 」

2. 집권 8대목표

「 통일운동의 보장, 그리고 통일정책의 획기적
추진, 대북한 군사관계에만 집중되었던 안보개념
을 한차원 높여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정치외교
역량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 의지에
기초한 종합적 국방력을 제고해야 한다 (6 항) .

민족자존을 지키며 국제화시대를 선도하는 외교
(7항).

주한미군 작전지휘권의 개선방안 검토」
< 1987.9.26 , 당정책관계자회의, 조선일보, 87.9.27,
한국일보, 87.9.27, 1면 >

특별인터뷰

1. 최근 일부대학생을 비롯한 젊은층의 급진좌경사조
와 특히 일부의 반미경향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 젊은 세대들의 진보적인 경향을 분별력있게 수
용하지 못하고 탄압의 구실로 삼는게 더 문제지
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만 충실하게 지켜나간다
면 과격의 요소는 그만큼 줄어들게 명백한 이치
고 비민주적인 여러집단이나 행위를 용납하지 않
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반미문제에 대해서 반미경향과 좌경·용공 문제는 엄격히 구별돼야 할 별개사안이에요. 나는 미국이 계속 군사정권을 지지한다면 한국에서의 반미운동은 급격히 증가할 수 밖에 없고 멀지않아 국민운동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 평소 구상하고 있거나 이번 선거에서 제시할 통일관은 무엇입니까?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가장 절실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번 통일문제는 민주·자주·평화의 3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통일논의의 개방, 민족동질성회복, 냉전이데올로기의 극복, 남북교류를 확대하고 남북한 군축과 경제협력, 상호불가침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최고정상회담

실현을 주창할 계획입니다.]

〈경향신문, 1987.10.8, 3면〉

김영삼총재 민족통일 구상

1. 자주평화통일 6대원칙

「첫째가 자주의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남북한 쌍방은 자신들의 일방적인 통일 정책만을 제시하고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주장만을 해옴으로서 외부로부터 긴장완화와 남북접촉을 위한 압력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압력에 의한 통일정책을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남은 북을, 북은 남을 비방하는 홍보전략의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말할나위 없이 통일문제는 외세의 간섭없이 민족 자주의 원칙아래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가 능동적으로 국제적 환경을 자주적으로 변

화시키고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가 화해의 원칙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냉전의 소산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란 이질적인 이념과 제도의 충돌이 그 비극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단이 만들어 놓은 남북의 양정권은 이미 사실상의 독립정부로서의 체제와 실력을 갖추어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대결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민족의 대단합과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통일을 제도상의 변경으로만 보고 연방제 또는 단일정부수립등을 문제의 쏠점으로 삼아왔던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 휴전선을 가운데 놓고 대치하고 있는 양체제간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실질적인 문제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세째가 단계적 성취의 원칙입니다.

남북이 통일을 하겠다고 40년동안 서로 맞서 오면서, 통일을 하겠다는 당사자들이 서로 반목하고 전쟁상태를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온 남북의 전쟁관계를 평화관계로 전환시키고 난 뒤 평화적인 협조의 범위와 심도를 넓혀 거기서 생기는 협조관계가 정치적인 협력의 기반을 만들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민주개혁 단행 및 대북한 민주개혁 촉구, 점진적 교류 및 쌍방의 실상공개, 비정치분야 협력 및 상호 자유왕래등으로 긴장완화와 화해의 기반을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정치외교분야 협력 및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째가 평화의 원칙입니다.

통일과업을 평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쌍방이 평화적 방법을 택하겠다는 의사의 합의를 물론 중요하지만 또 쌍방이 평화적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정치와 안보의 여건조성이 더욱 필요합니다. 무력으로 통일하지

않겠다는 의사 그리고 쌍방이 혁명이나 선동으로 내부적인 정치변화를 일으켜 통일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상호비방이나 상호 내정간섭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가 전환의 원칙입니다.

남북의 대립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을 뿐 아니라, 언제다시 전쟁이 재연될지 모른다는 준전시 체제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남북 양측의 군사력은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이 군사력이 국토방위라는 군사적인 임무를 넘어 국내의 정치사회 제부분에 까지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쌍방은 내부체제를 평화태세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의식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작업은 민주주의 회복으로 민주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나 민주정권 담당자는 의식적으로 내부의 여건을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와 보조를 맞추어 자유화하는 조치를 취해 나

가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가 민족 대참여의 원칙입니다.

남북 양 체제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협조의 길을 넓히는 작업은 정부 당사자들의 책임이지만 남북간에 흩어져 있는 겨레사이에 동족애와 동질성을 키워 나가는 작업은 국민 모두가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화해는 바로 이와같은 개인적 교류와 유대를 증대시키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남북한의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이산가족이 다시 뭉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여행과 통신의 자유를 통해 통일을 위한 남북간의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2.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제 1 단계는 국내의 민주개혁을 단행하고 북한의 민주개혁을 촉구하는 단계입니다. 민선·민간정부가

수립된 후 통일을 위한 대화의 기본적 전제인 남북한의 민주화를 위하여 먼저 우리의 내정개혁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외교개혁을 단행하고 북한정권에 대하여도 민주화를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통일논의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일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2 단계는 모든 분야에서 점진적 교류를 추구하고 쌍방의 실상을 공개하는 단계입니다.

서신교환, 체육교류, 고유문화 및 민속교류, 성묘단교환, 친지방문, 취재와 보도 및 관광의 허용, 간접교역 증대, 직접교역 모색등 교류와 실상공개를 통하여 민족의 동질성과 신뢰회복을 길할 것입니다.]

[제 3 단계는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왕래를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민족의 뿌리 및 역사찾기 운동의 공동전개, 대외
공동공연 및 전시회의 개최, 관세철폐를 통한 간
접교역 추진, 교통통신의 자유이용 및 왕래절차의
간소화등을 통하여 경제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긴밀히 함으로써 상호 자유왕래
의 기틀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4 단계는 정치·외교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 민족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형성된 민족의 동질성과 상호신뢰를 바탕으
로한 상호 이해의 기반위에서 대비동맹 및 유엔
외교의 공동보조를 모색하고 남북한의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 5 단계는 일민족일체제의 평화적 민족통일을 선
포하는 단계입니다.

앞단계들이 실질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추진 실천되
어, 온 민족이 상호협조체제의 가치와 의의를 충
분히 인식한 위에 공동체로서의 완숙기를 거친후,

준비된 통일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남북한 주민들의 최종확인을 거쳐 내외에 일민족 일체제의 한민족 공동체를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민족공동체제 통일방안 (1987.10.12), 2-4면 >

87.1.26, 인천호텔 송도비치, 감리교 선교국 도시산업선교위 주최, “노동자선교를 위한 복직자 세미나”

「나는 진정으로 대담하게 통일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이 되면 5년임기중 통일의 기초를 다져놓고 물러나겠다」

< 「조선일보」, 87.10.27, 1면 >

1987.11.6, 관훈클럽토론회 1문1답

1. 김총재의 5 단계 통일론은 현정부 및 김대중씨의 통일론과 어떻게 다른가?

「26년전 어머니가 고정간첩에 의해 불행하게 살해된뒤 분단의 비극을 절감하여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나의 5 단계 통일론은 이 정부의 통일론과는 다른 1민족 1체제의 통일공동체를 발표하자는 것이다.」

2. 민주당 1백대 공약중 비핵지대화가 있는데, 진보론까지 흡수하자는 것인가, 그 배경은 무엇인가?

「정책으로 확정되기전 시안이 보도됐다. 집권하게 되면 여러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겠다. 미군철수 주장도 있으나 어느정도까지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전쟁억지력이 되고 있다.

물론 영원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조선일보」, 87.11.7 자>

1987. 11. 9, 세종문화회관 별관, 대통령 후보 추대식

대통령후보 수락 연설문(요지)

「민주당 정부는 분배의 정의를 구현하여 분배를 통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통일과 화해의 주체인 민족성원에게 통일논의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다. 이번 선거 투쟁은 6월시민 항쟁의 연장으로서 군사독재를 청산, 종식시키는 과정일 수 밖에 없으며, 소외된 국민을 위한 투쟁이고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길이다」 <조선일보, 87.11.10 자, 2면>

**1987.11.18, 파주·금촌·문산 지역유세 및
공약 제시**

남북한 교류 점진적 촉진 문제

「내 생애에 비록 통일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긴장완화와 민족화해의 기틀만은 기필코 실현하겠다. 앞으로 될 민주당 정부는 남북간에 서신교환, 성묘단교환, 체육, 문화교류, 친지방문등 모든 분야에서의 점진적 교류를 촉진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나는 새 조국의 건설과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창조한다는 자세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성원내부의 화해와 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

<경향신문, 87.11.18 자, 1면, 동아일보, 87.11.18 자, 1면 >

안보문제

「그동안 이정부는 안보문제를 갖고 국민을 탄압하고 독재연장에 이용해 왔습니다. 27년 동안

봄이오면 가을이 위험하다고 하다가 가을이 오면 봄이 위험하다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소련과 중공이 지원하지 않는 한 김일성은 감히 남침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절대 다수도 반공정신에 투철합니다.]

<조선일보, 87.11.19 자, 2면>

1987.11.18,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개신교 목회자 조찬기도회 인사말

통일논의

「북한의 실상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반공에 도움이 될텐데 현정부는 통일논의를 독점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을 몇일만 국민들에게 보이면 국민들이 절로 공산주의를 알게돼 안보교육이 될 것이다.」

<경향신문, 87.11.18 자, 2면>

공약 정리

1. 통 일

임기중에 남북간에 교류를 할 수 있게하여 통일
의 기반을 닦겠다. 통일논의에 광범위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이며,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을 펼쳐 나가겠다.

통일은 ①자주의 원칙, ②화해의 원칙, ③ 단계적
성취의 원칙, ④평화의 원칙, ⑤전환의 원칙, ⑥민
족대 참여의 원칙하에 이뤄져야 한다.

통일방안으로서는 국내의 민주적 개혁을 단행하고
북한의 민주개혁을 촉구하는 제 1 단계, 모든 분야
에서의 점진적 교류를 촉진하고 쌍방의 실상을
공개하는 제 2 단계,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을 강화
하고 자유왕래를 시도하는 제 3 단계, 정치·외교분
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민족통일을 준비
하는 제 4 단계, 1민족 1체제의 평화적 민족통일

을 선포하는 제 5 단계를 거치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한다.

2. 외교·안보

「안보문제를 정권유지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북한실정을 가능한한 알릴 수 있는데까지 알려 국민들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국가를 위해 싸울 수 있게 하겠다.」

「군의 정치개입은 종식되어야 하며, 군의 정치적인사운영 및 조직관리를 민주화 시켜야 한다. 하사관이상 직업군인에 대한 종신복지대책을 강구 하겠다. 군을 야전군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치권내에 있는 경호실, 보안사, 안기부 장교의 기능을 모두 전문화, 축소 조정해야 한다.」

〈조선일보, 87.11.26 자, 3면〉

Ⅲ. 平和民主黨 金大中大統領候補의 統一關聯 發言

민추협, 8.15 42주년 기념경축사

1. 공화국연방제 전제조건

「민주정부가 수립되어 국민의 자발적이고 전면적인 지지를 받을 때 북한공산주의자는 남한공산화의 야심을 포기할 것임(민주정부수립, 북의적화야욕 포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대국평화보장”이다.」

2. 공화국연방제 주요골자

「남북한 양지역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완전한 독립정부를 인정하되 그 양 독립정부위에 권한이 매우 제약된 상징적인 중앙연방기구를 설립한다. 따라서 1연방 2독립정부를 통한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론이다.」

3. 연방기구

「양쪽의 독립정부에서 대표를 파견해 구성하는 연방정부와 남북의 민간대표로 구성된 연방의회로 구분. “금강산 구경가고 원산해수욕장에 가는식”이지만 그것이 평화무드 정착과 민족동질성 회복에 제 1단계 작용이 가능. 연방정부는 단순한 상징이기 때문에 경제·문화·학술·체육·언론·인도적 교류등 현재 여타의 공산권과 모색하고 있는 정도의 교류만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연방의회에도 단지 남북의 대표가 모여서 민족 화해와 동질성회복의 길을 모색한다는 원칙하에 연방정부의 기능을 분담한다.」

4. 1연방 2독립 정부

「1연방 2독립정부 체제 밑에서 상호이해의 조정을 바탕으로 그 권한을 중앙정부로 이관하여 완전한 통일정부를 이룩. 이같은 권한이양을 “다

음 세대의 몫”으로 설정, 단지 상징적. 제한적 연방기구만 만들어 놓으면 30~40년 혹은 그 이후에는 국방이나 외교권까지 갖는 연방정부가 형성되어 통일을 이룰 수 있음. 북의 주장은 사실상의 완전한 통일로서 현단계에서 실현불가능한 주장일 뿐이다.]

<조선일보, 1987. 8. 18, 2면. “민추협의 8. 15. 광복 42돌 기념 경축사”>

시국대처 7개항 요구사항 및 과제 제시

1. 민주정부수립후 과제

「억압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한 반공과 안보의 악용을 완전히 종식시킬 것(2항). 민주정부가 서면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해 그 이후 남북간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됨. 이에 대비해 다음 정권은 평화적공존, 평화적교류, 평화적통일의 3단계 통일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4 항)」

< 87. 9. 26, 인천지역 방문대중연설, 한국일보, 87. 9. 27, 1면. 조선일보, 87. 9. 27, 1면 >

3 단계 통일방안

「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젊은세대 사이에 최근 점증하고 있는 통일접근의식에 대하여 정부가 구시대적 시각에서 좌경용공으로 매도만 할 것이 아니라, 민족역사적 측면에서 긍정할 점은 긍정하고, 현실적 측면에서 유보할 점은 유보하도록 유도하는 통일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당의 김대중상임고문이 하나의 시안으로서 제기한 3 단계 통일방안은 그 내용이 일단계에서 향후 5년간 어떤 경우에도 전쟁위험이 없도록 긴장완화에 힘써 평화를 정착시키고 다음 단계에서 모든 분야의 상호

교류를 모색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재확인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길을 닦아주고, 마지막 3단계에서 다음 세대가 평화통일의 문을 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김대중상임고문의 통일방안에 대하여 비방할 것이 아니라 통일문제를 주관하는 통일원에서 당사자를 초청하여 심도있게 논의해 볼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통일민주당 대표연설문, 제 137 회정기국회 (87. 10. 6), 28-31 면〉

특별인터뷰

1.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급진좌경사조와 반미성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격주의자가 있는게 사실이지만 우려할만큼 큰 수는 아니예요. 민주화만 되면 과격주의나 극단주의는 희석화될 것으로 낙관합니다.」

2. 이번 선거전에서 제시할 김고문의 통일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나의 통일론과 김일성통일론이 유사하다는건 거짓말이에요. 북의 것은 오히려 현정부의 통일론과 가까워요. 둘다 당장 단일정부 만들자는 거예요. 불가능한 소리지요. 나는 우선 공존과 교류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남한에 민주정부가 서면 공산당과 일대일로 실력대결해 항구평화체제를 구축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일등과 협의하고 4대국 협력을 받아야죠.

평화공존체제하에서 남북한은 각종교류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자는 것이죠. 차기정부의 5년동안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세대에서 통일하자는 것이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구로서 공화국연방제란 말을 사용했는데 북의 연방제와 용어가 유사하다고들 해서 이제 안쓰기로 했어요. 나는 통일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굳이 용어때문에 오해받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경향신문, 1987. 10. 9, 3면〉

대권주자에게 묻는다

최근 통일원장관은 김고문의 통일론이 북한을 우
쫓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만, 집권할
경우 어떤 통일정책을 펴나갈 작정입니까?

「현재 나와있는 통일 방안으로는 대한민국, 북한,
그리고 나의 방안이 있는데 사실 이 가운데 가
장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게 내것입니다.

신문보도를 보니 통일원장관도 내용에 대해선 비
판을 못하고 “공화국연방제”란 명칭에 대해서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더군요. 그래서 나는 오
해받을 수 있는 명칭은 더이상 앓겠다고 이미
발표한바 있습니다.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의 3단계 통일론은

지난 70년이래 나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동아일보」, 1987년 10월 21일자, 3면〉

1987.10.25, 고대, 「민주쟁취 청년학생공동위 창립 및 거국중립내각쟁취 실천대회」연설

「김정렬 내각으로서는 공명선거가 힘든만큼 이 정권이 불행을 면하는 길은 거국중립내각 구성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언론자유 실현, 해직노동자, 교사, 공무원등의 즉각적인 복직, 통일논의 보장하라」
〈「동아일보」, 87.10.26자, 1면〉

1987.10.28, 여의도 여성백인회관, 기자회견, 「출마. 창당선언」 및 5대 공약제시

「모든 국민에게 정의와 생존권이 보장되고 자주 의 바탕위에서 통일에의 초석을 닦는 화해의 시대를 열기위해 대통령에 출마하려 한다.」

「 통일추진 (5항)은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 단계 통일론을 바탕으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실현에 진력하겠다. 」

〈 「 경향신문 」 , 87. 10. 28일자, 1면 〉

평화민주당 발기인 대회 (87. 10. 30, 천도교수
운회관)시 김대중 창당준비위원장 인사말

「 재야 민주세력과 연대, 군부중립아래 민주주의의 성패를 거는 정당이 필요해 신당을 창당하겠다. 당의 진로를 민족민주정통성확립, 온건개혁주의 정립, 중산층과 근로계층이익대변, 국민화해, 정의경제, 군부중립, 자주외교, 통일추진의 5대공약 실현에 두겠다. 」

〈 「 동아일보 」 , 87. 10. 30, 1면 〉

「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국민의 생존권과 통일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의 성취자와 수호의 역할을 다하겠다. 」

〈 「 경향신문 」 , 87. 10. 30, 3면 〉

평화민주당 발기 취지문 : 통일분야

통일추진

「우리는 전쟁의 재발을 막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며 남북간의 공존과 궁극적 민족통일을 기하는 과정으로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의 3단계 통일정책을 주장한다. 남북간에는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관광·우편·친족간의 상호방문과 인도적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기본적 국가이익을 훼손하거나 공산주의를 이롭게 하는 어떠한 통일방안에도 반대하며 주변 4대국의 남북한 동시교차승인을 실현해 보다 안정된 한반도에서의 평화유지기반을 조성케 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박해와 방해에도 굴치않고 반드시 영광된 새 정의의 한국을 세워나가는 선도

적 결집체가 될 것임을 다짐한다.]

< 「동아일보」, 87. 10. 30, 2면 >

**민주연합청년회 산하 「민족통일애국운동청년단」
(대학생 조직) 창립발기대회시 김대중씨의
학생들과 토론내용 (87.10.27)**

「해방후 우리가 민족정통성을 회복 못한 것은
친일파를 제거못한데 있었으며 해방은 말만 해
방이지 일제의 연장이었다.」

「실용주의적인 서구식교육에서 탈피해 민족사관
적 시각에서 역사를 재해석할 것. 이와함께 국
민주권적 입장에서 정몽주, 식시황, 이성계 등에
대해서도 다른 역사교육을 펴나가겠다.」

「핵문제와 올림픽 공동개최문제는 민주정권 수
립후 국민여론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

「민주정부후에는 대국의 이익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 민족생존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자주 외교를 펴나가겠다. 친미도 반미도 할 필요없이 철저히 우리국익을 기준으로 외교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미군철수문제도 남북간 평화 정착후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조선일보」, 87. 10. 28〉

김대중씨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일문일답
(87.10.30)

「민중사관이야기는 국민대중으로부터 배우자는 것이 지 계급사관이 아니다. 무슨 사관이라고 할 지식도 없다.」

「연방제는 북이 아니라 내가 먼저 '73년 일본에서 말한 것이다. 오해가 있다면 그런 이름을 안쓰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한반도 비핵지

대화는 내가 말한바 없고, 민주당 정책안에 나온 것이다.

정권을 잡으면 안보사정을 감안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 결정할 것이다.

군축은 남북간 평화정립전에는 있을 수 없다.」

「며칠전의 이야기는 취재보도가 좀 부정확했다. 토인비도 진시황을 높이 평가했는데 그같은 역사학설도 있다고 소개한 것이며, 정몽주에 대해 역사적 평가를 바꾸겠다고 한것은 아니다. (그는 지난 27일 대학생과의 토론에서 식민사관 극복과 교육개혁방안을 묻는 질문에 진시황이 법치주의등 근대적 제도를 도입했다는 설명과 함께 민중사관, 국민주권적 시각에서 재해석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87. 10. 31 >

**87.11.12, 세종문화회관 별관, 평민당창당 대
회겸 대통령 후보추대 대회 연설**

통일분야 정강정책

(강령 : 통일추진)

「우리는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삼단계 통일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동족간의 비극적 전쟁의 재발을 막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 <1987. 11. 12, 「평화민주당」 정강정책 >

(기본정책 : 평화통일의 지향)

「 1. 남북한 책임자 각료급 평화통일 협의기구
설치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단계 정책추진을 위하여 남북책임자회의의 년례화, 정례 남북각료급협의기구의 상설화를 추진한다.

2. 주체역량의 결집

내정의 민주화와 경제력을 토대로 하고 총체적 국력신장으로 민족통일을 향한 주도권을 확립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오도된 “민족통일중앙협의회”,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해체하고 실질적인 「평화통일정책협의회」를 새로이 발족한다.

3. 남북교류의 추진

서신왕래 가족친지 방문등 인도적 교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학술, 문화, 체육, 관광등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를 거쳐 물자 교환 통상거래등 경제분야의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한다.

4. 통일기반 구축

실질적 평화체제 확립을 위하여 장기화된 휴전상태를 종식시키고, 주변 4대국과 UN

의 협력하에 남북공존, 남북교류등을 활성화하여 국제협력과 통일기반을 구축한다.」

〈1987. 11. 12, 「평화민주당」 정강정책〉

대통령후보 수락 연설 (요지)

「나는 전 정치생활을 통해 남북간의 평화통일에 대한 일념을 견지해 왔다. 내가 주장해 온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의 3단계 과업중 평화민주당 정권아래서는 제 1.2단계가 이루어질 것이며 구체적인 통일의 추진은 아마 그다음 정권에 의해 본격 추진돼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일보, 87. 11. 12 자〉

1987.11.18, 송탄·평택·천안 지역유세 및 공약제시

- 남북한 단일로 유엔가입 및 한국군 작전통제권 문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 한반도가 항구적으로 분단될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고 함께 가입했다 통일이 되면 단일회원국이 되는 방안도 있다. 남북한이 인구를 합치면 세계 10위 내지 13번째 대국인데 한민족이 유엔밖에 있다면 비정상이다. 북한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끝내 불응할 경우 남북한이 단일회원국으로 유엔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

이같은 방식은 남북한의 통일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한이 하나의 회원국으로 유엔에 가입할 경우 남북한이 유엔에 공동수석대표를 두거나 반년씩 대표를 교대로 할 수 있으며 투표때는 남북한 합의에 의해 해야 하며 합의가 안되면 기권하는 방안등을 생각, 회원국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 자국군대의 작전지휘권이 타국군대에 예속되는 것은 비자주적 정책이다.

평민당이 집권하면 반드시 작전 지휘권을 한국
군에 회수하겠다.」

〈경향신문, 87. 11. 18 자, 1면, 동아일보, 87. 11.
18 자, 1면〉

1987.12.1, 안산시 유세

○ 판문점을 통일시로 개칭

「평민당이 집권하면 동족상쟁의 비극을 표상하
는 판문점을 통일시로 개칭하고 주변을 민족통
일공원으로 개발키 위해 남북기술진이 공동으로
협약해 분단의 비극을 위대한 민족통합으로 승
화시키겠다.」 〈조선일보, 87. 12, 2 자, 1면〉

1987.12.2, 강릉등 동해안 지역유세

○ 남북 공동어로 구역 설치

「남북평화공존의 기초위에서 동해안과 서해안에

남북공동어로 구역을 설치,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보장하겠다.」 <조선일보, 87.12.3 자, 1면>

공약 정리

1. 통 일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 단계 통일정책을
추진해 동족간의 비극적 전쟁을 막고 민족의 동
질성을 회복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주도적 역
할을 하겠다. 1 단계로 남북간의 평화공존체제를
이룩하고 2 단계로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해 동질성을
회복하겠다.

특히 현재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항구
적 평화체제를 이루겠다.

3 단계 정책추진을 위해 남북책임자급회의의 년례
화, 정례 남북각료급 협의기구 상설화를 추진하겠다.

2. 외교·안보

우방과의 우호관계를 보다 견고히 하는 한편 비동맹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국익과 민족생존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대외자주의교를 적극 추진하겠다.

외교의 기본틀은 미-일등과 친선, 협력을 유지하는데 변함이 없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강대국에 끌려다니거나 정권유지를 위해 국가이익을 소홀히 하는 비자주적, 굴욕적 외교자세를 지양하고 자주적입장에서 자기발로 걸어가는 독립, 독보의 외교모습을 보이겠다.

이를 위해 집권하면 군작전지휘권을 회수하겠다.

남북한 교차승인과 유엔동시가임을 추진하겠다. 교차승인을 하면 영구분단의 위험이 있다는 북한주장은 부당하고 모순된다.

교차승인에 앞서 중공과의 무역대표부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다. 국군헌장을 제정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하고 군특수기관의 정치공작 감시 기능을 폐지하겠다.

3. 교 육

남북공동국어연구소를 설치·운영해 민족동질성 회복에 주력하겠다. <조선일보, 87. 11. 26 자, 3면>

IV. 新民主共和黨 金鍾泌大統領候補의 統一關聯 發言

신·대통령이 해야 할 5 개 항

「민족 염원인 통일은 국력의 절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자주적 방식에 의해 점진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5 항).」

<1987.9.29, 충남부여연설, 서울신문, 87.9.30, 2면,
조선일보, 87.9.30, 1면>

신당준비 특별 인터뷰

1. 최근 일부대학생을 비롯한 젊은층의 급진좌경사조를 어떻게 평가하며 특히 일부의 반미경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급진좌경사조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이 젊은층이나 사회적으로 호소력을 지니게 될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같은 좌경사조가 매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도록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나 비리를

다듬어나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책임이 우리 정치인들과 기성세대에 더 많다고 봅니다.

또 무엇을 반미라 하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곧 반미로 일괄매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한다고 모두 반정부라고 말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제 민주주의하는 마당이니 이같은 다양한 소리를 어떻게든 수용하고 설득, 납득시켜 조화해 나가는 것이 민주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젊은층을 비롯, 일반에서 통일문제에 관심이 점점 하고 있는데 평소 구상하고 있거나 이번선거전에서 제시할 통일관은 어떤 것입니까?

「동독의 공산당서기장이 서독의 고향을 방문하고 대만의 기자들이 중국대륙을 취재하며 누비고 다니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추세에 편승해 허황된 통일방안을 무책임하게 제시하기 보다는 이미 정해진 통일정책인

6.23 선언의 기조에 따라 국민적 합의를 얻고 화해의 정신을 바탕으로 동족간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대화와 교류를 끈기있게 추진하는 것이 나의 통일관이라면 통일관입니다.

통일문제를 한낱 정치적 이용물로 삼기에는 너무나 엄숙한 과제입니다.」

〈경향신문, 1987.10.10, 4면〉

신민주공화당 창당선언문 및 주요강령과 기본정책 (통일분야)

○ 창당선언문

「민주화와 인간화를 바탕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하며 위대한 통일조국을 기약해 나갈 것이다.」

○ 강 령

「우리는 동족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의 정신을 바탕으로 조국통일을 평화·민주·자주의 원칙하에 주도한다.」

○ 기본정책

「평화통일의 주도 : 민족의 통일문제는 모든 정파의 이해를 초월해 국민적 합의하에 신뢰할 수 있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 일관성있게 추구한다.」

〈「동아일보」, 87.10.30, 3면〉

**신민주공화당 창당대회겸 대통령후보지명
(87.10.30, 홍사단강당) 시 지명수락
연설**

○ 5대공약

「참된 민주화의 정착, 공정한 분배의 실현, 신뢰와 화합의 사회건설, 힘있는 나라의 건설, 조국통일의 조기성취」

○ 급진좌경세력

「최근의 좌경극렬 투쟁은 정말 좌경사상에 오염됐다가 보다는 현정권에 대한 반정부 활동과

정에서 좌익적 투쟁방법을 원용한 경우도 적지 않다. 잘못된 학생에게 있다기 보다 바로 그 투쟁대상인 현정권에 있다.」

〈「경향신문」, 87.10.30, 1,3면〉

“공화당 김종필총재에게 묻는다”(동아일보
데스크 그룹인터뷰)

- 최근에 좌우이념논쟁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학생들의 좌경화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나는 신민주공화당 창당발기인 대회에서 “대한민국이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다”고 했읍니다만 공산주의와 급진주의만은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부 학생들의 그런 경향을 크게 걱정하는 편은 아닙니다. 일본이나 서독청년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십수년전에 일과성으로 다 겪은 일 아닙니까?
남의 나라에선 다 끝난일이 유독 우리나라에서
만 금과옥조가 되리라고 볼 수도 없는 일이고
시간의 장단은 있겠으나 해결될 것이라 봅니다.
소위 의식화된 대학생을 직접 만나보기도 했는데
무척 대화에 굶주리고 있는걸 느꼈습니다.
그들도 어쨌든 내일의 주역들인데 그들을 어디
로 내쫓을 수가 있나요. 나는 학생들에게 “소
련도 이데올로기면에서 분해과정을 겪고 있으며
중공도 마찬가지로 아니냐” “나이 젊어서 왼쪽
(좌경)에 서보지 못하면 하트(정열)가 없고
나이들어 오른쪽(우경)에 서지 않는 사람은 브
레인(지성)이 없다는 말도 있지않느냐”고 이
야기 합니다. 그런 젊은이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아니고 다만 포기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 「동아일보」, 87.10.30, 3면 >

공약 정리

1. 통 일

조국의 통일은 국민적 합의의 확고한 원칙하에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불쑥불쑥 즉흥적으로 문제를 던져서는 안된다. 분단이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의해 빚어진 것이라면 통일 역시 국제질서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안으로는 상호신뢰와 동질성을 회복하면서 심도있는 대화를 펴나가는 한편,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과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다.

2. 외교·안보

현역 및 방위병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하고, 농어촌 정착청년들은 특례보충역에 편입시키겠다.

예비군과 민방위의 복무연령을 각각 30세와 40
세로 낮추고 예비군 훈련시간을 줄이겠다.

〈조선일보, 87.11.26 자, 3면〉